

# 여전히 석탄 채굴중인 한국... 기후위기를 앞당기다

2015년, 한국 정부 및 세계 각국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20개국(G20)은 석유, 가스, 석탄 사업에 매년 최소 9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며 파리협약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였고, 화력 발전에 신재생에너지보다 3배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은 화력발전에만 매년 평균 7.8조원을 투입하며 중국 29조원, 캐나다 13조원, 일본 10.6조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화력발전에만 투입한 국가가 됐다. 상기 4개국에서 모두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화력발전에만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했고, 이는 G20 전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화력발전 자금지원 중 무려 80%를 차지한다.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다시 탈화석연료로 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제 집권여당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의 점진적 감축을 기조로 하는 신설 에너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해외석탄금융의 전면 금지를 통해 그린뉴딜 공약을 이행하고 파리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표1. 국내기관별 공적금융 연간평균 지원현황 (2016-2018, USD)

기관명	총액
한국수출입은행(KEXIM)	\$3,524,155,000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2,943,500,000
한국산업은행(KDB)	\$1,489,384,133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두산중공업 등 화석연료에 집중해온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구제를 제공하며 화석연료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기업의 도산을 막고자 이루어진 긴급 수혈이지만, 애당초 해당 기업이 유동성 경색을 겪은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세계에너지시장의 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반하는 사업을 고집한 탓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집권여당의 4월 총선 공약에 포함된 그린뉴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문 정부는 반드시 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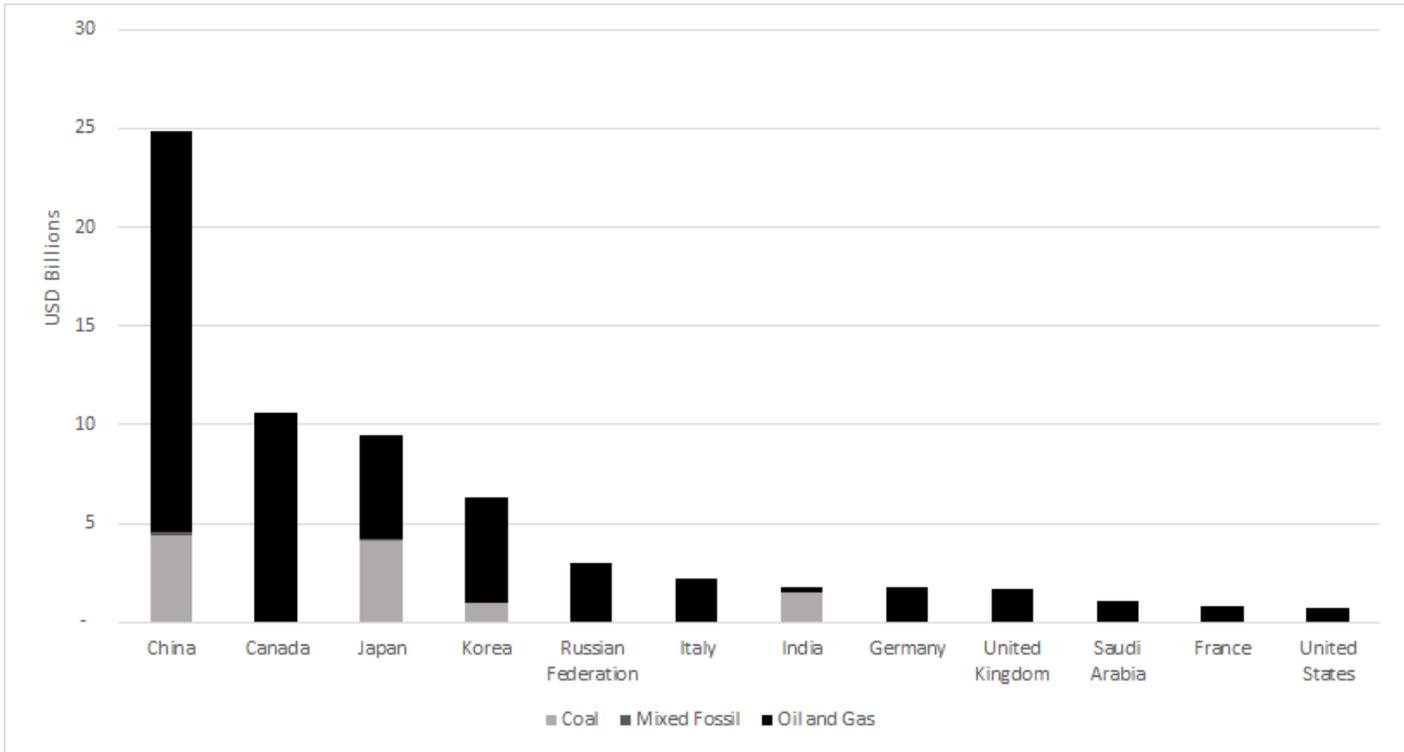
뉴딜 공약을 이행하여 금융공기관의 해외석탄금융을 금지함은 물론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G20 국가의 국제금융공공기관은 에너지 분야 전반 및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기후위기대응에 있어 민간금융기관보다 훨씬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력 행사를 통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기보다, 되려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지탱해 주고 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파리협약에 따라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석유, 가스, 석탄 사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조속히 중단해야 하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공기관이 핑계대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



표2. G20 화석연료 공적금융 상위 12개국의 연간평균 지원현황 (2016-2018, USD)



### 석탄금융에만 수 조원 투입... 앞으로도 수 조원 추가 투입 예정

한국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금융지원을 해왔고 현재도 동남아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수 조원의 추가지원을 고려 중이다. 2017년 석탄금융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국제규제(CFSU)가 발효됐지만,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인도네시아 치르본(Cirebon) 2 석탄화력발전소, 베트남 빈탄(Vinh Tan) 4 익스텐션 화력발전소와 응이손(Nghi Son) 2 석탄화력발전소에 2.2 조원을 제공했으며, 2,000MW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 화력발전소와 1천200MW 규모의 베트남 붕앙(Vung Ang) 3 석탄화력발전소에 추가지원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사업부지로 선정된 지역은 이미 보건위생 취약지로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자와(Jawa) 9·10 호기만 하더라도 전체 사업주기 동안 조기사망건수가 약 2,400 명에서 7,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에 끔찍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현지 주민들이 한국 금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현지 도처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건설 중이다. 해당 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ESIA)에 의하면 신규로 건설되는 7기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4천3백만 톤에 달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뛰어난 경쟁력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석탄금융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빠르면 2020년,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짓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1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탈 화석연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여야 막론하고 십 수 명의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의 석탄금융을 비판한 바 있다.

### 한국, 석탄금융 관련 규제 미비

문 대통령이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여전히 석탄금융에 대한 국내규제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문 정부는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추가지원이 없을 것이라 발표했지만, 석유·가스 사업 지원 또는 화석연료 간접금융에 대한 규제는 전무하다.

2017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금융을 제한하는 국제규제(CFSU)가 발효되면서, OECD 국가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초초임계압(ultra-supercritical) 기술을 사용하는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형 발전소(초임계압(supercritical) 기술 사용 시 500MW, 아임계압(subcritical) 기술 사용 시 300MW)를 제외한 모든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2018년 기준 한국 석탄금융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해마다 유동적인 자금지원 규모로 인해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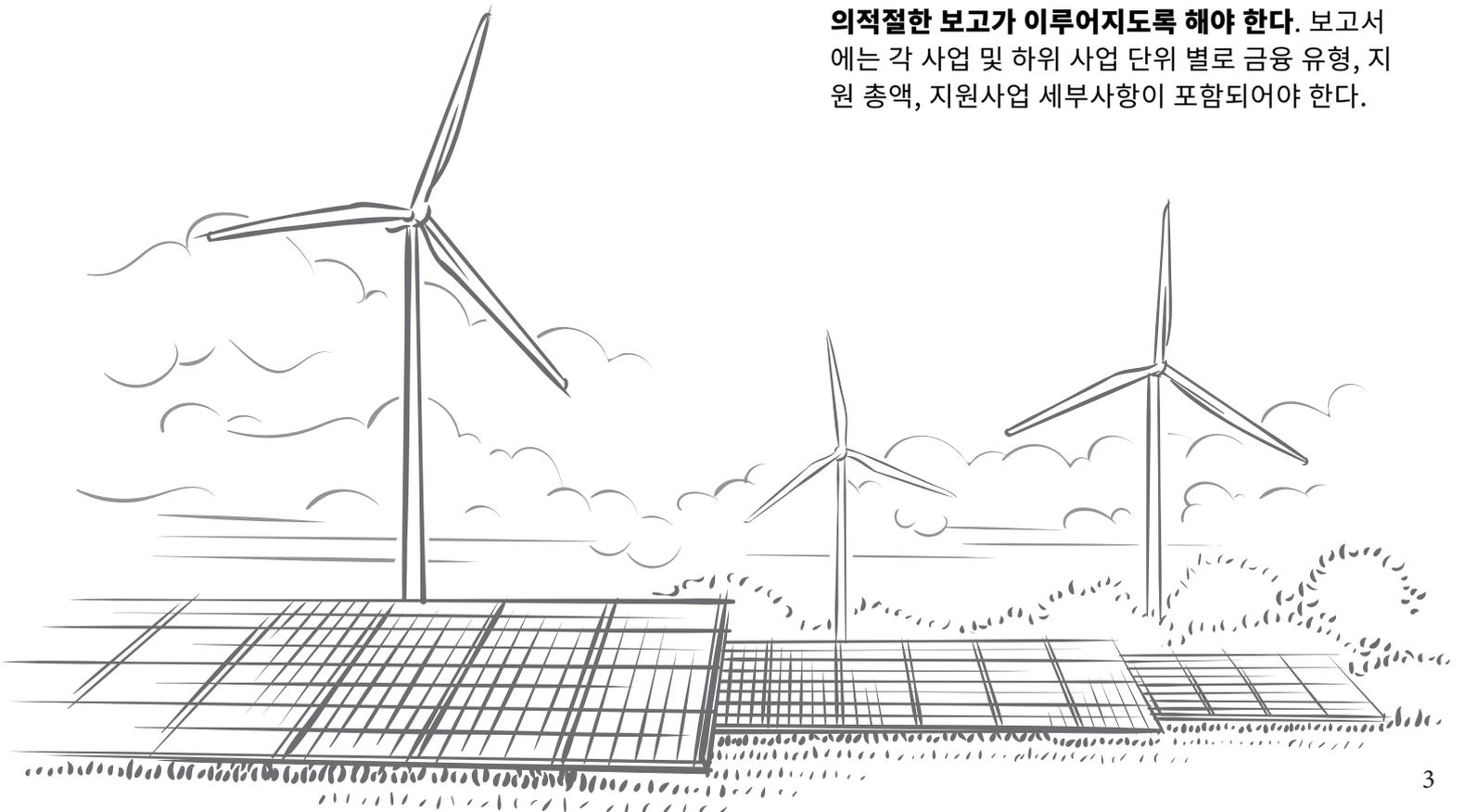
## 제언

앞으로 한국은 국내 및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 금융지원을 보다 기후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문 대통령에게도 그린뉴딜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실렸고, 따라서 석탄산업 규제금융 등 과거로의 후퇴는 지양해야 한다.

이하,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했다.

- 한국 정부는 회복력 있는 공정한 탄소제로사회로 나아가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합당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코로나19대응 경기부양책을 통해 두산중공업 등 화석연료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근로자를 구제해야 한다. 나아가 저소득국 및 저소득지역에 무차입금융(debt-free finance)을 우선시하여 공정한 국제사회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
-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은 그동안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석탄금융을 지속하는데 일조한 CFSU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도록 OECD에 주창해야 한다.
- 한국 개발금융기관(DFI)인 한국산업은행은 지속 가능하고 청정하며 공정한 화석연료제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임무를 수정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국내외 석유, 가스, 석탄 사업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공연히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화석연료의 탐사, 추출, 운반 및 발전소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 이에 더해 관련 기반시설, 자문서비스, 기술지원, 금융중재기관 등을 통해 간접석탄금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허점 없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그린뉴딜 공약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공정한 에너지 전환 계획 및 에너지 접근성에 대한 투자를 신속히 확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1) 화석연료 의존도가 큰 지역사회 및 관련업 종사자를 위해 공정한 에너지 전환 계획 실행
  - 2) 가장 심각한 수준의 취약국이 저탄소개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후금융 제공
  - 3) 전기 접근성이 가장 낮고 청결한 조리 환경이 가장 부족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미니그리드(mini-grid) 및 오프그리드(off-grid) 설비 마련
- 한국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 생애주기 배출량을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여, **실행된 모든 에너지금융에 대해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각 사업 및 하위 사업 단위 별로 금융 유형, 지원 총액, 지원사업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NDNOTES

- <sup>1</sup> Kim Soo-yeon, (6th LD) *Ruling Party Wins Landslide Victory in Parliamentary Elections amid Pandemic*, Yonhap News Agency, 16 Apr. 2020, <https://en.yna.co.kr/view/AEN20200415005856315?section=national/politics>.
- <sup>2</sup> Marian Willuhn, *South Korea's President Makes Zero-Carbon Economy Election Pledge*, PV Magazine, 27 Mar. 2020, <https://www.pv-magazine.com/2020/03/27/south-koreas-president-makes-zero-carbon-economy-election-pledge/>.
- <sup>3</sup> Andreas Anhäuser et al., Greenpeace, *A Deadly Double Standard: South Korea's Financing of Highly Polluting Overseas Coal Plants Endangers Public Health* (Nov. 2019), [https://storage.googleapis.com/planet4-international-stateless/2019/11/ea2d3c1d-double\\_standard\\_report-high-resolution.pdf](https://storage.googleapis.com/planet4-international-stateless/2019/11/ea2d3c1d-double_standard_report-high-resolution.pdf).
- <sup>4</sup> Andreas Anhäuser et al., *Health Impacts of Units 9-10 of the Jawa Coal-fired Power Plant in Banten, Indonesia*, Greenpeace (Nov. 2019), [www.marketforces.org.au/wp-content/uploads/2019/12/Korean-Jawa-9-10-Health-Impacts-compressed.pdf](http://www.marketforces.org.au/wp-content/uploads/2019/12/Korean-Jawa-9-10-Health-Impacts-compressed.pdf).
- <sup>5</sup> Jane Chung, *South Korea Fires up on Renewables, to Close More Coal Plants*, Reuters, 18 June 20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energy-renewable-analysis-idUSKCN1TJ0JK>.
- <sup>6</sup> Based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estimat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for Samcheok Pospower Coal Power Project, available at <https://eiass.go.kr/> (last visited 15 May 2020). The EIA states that 13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will be emitted from the 2.1 gigawatt (GW) plant. Based on this number, we can calculate that approximately 43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will be emitted from the 7 GW fleet.
- <sup>7</sup> Carbon Tracker, *Economic and Financial Risks of Coal Power in Indonesi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29 Oct. 2018, <https://www.carbontracker.org/reports/economic-and-financial-risks-of-coal-power-in-indonesia-vietnam-and-the-philippines/>.
- <sup>8</sup> Solutions for Our Climate, *Legislators Slam Korean Government on Dirty Coal Power Finance*, 11 Nov. 2019, <https://www.youtube.com/watch?v=bvH-oy3OUrM>.
- <sup>9</sup> Republic of Korea, *Speeches and Remarks, Remarks by President Moon Jae-in at a Ceremony Marking the Permanent Closure of the Kori No.1 Nuclear Reactor*, 19 June 2017, <https://english1.president.go.kr/BriefingSpeeches/Speeches/4>.
- <sup>10</sup> OECD, *Sector 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s for Coal-Fired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s*, 27 Nov. 2015, TAD/PG(2015)9/FINAL,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doclanguage=en&cote=tad/pg\(2020\)1](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doclanguage=en&cote=tad/pg(2020)1). Only certain types of financing, such as export credit guarantees and insurance, direct credit financing and refinancing, and interest rate support, are covered.